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여신금융협회
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

보도	2023.11.16.(목) 조간	배포	2023.11.15.(수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	책임자	국 장	이호진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임연하	(02-3145-8800)
	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	책임자	본부장	조윤서	(02-2011-0740)
		담당자	부 장	이효택	(02-2011-0724)

금감원, 여전업계와 함께 「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」 마련

I. 개 요

- 여전사는 多數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, 중고차·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, IT·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
 -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

구분	업무 특성	취약 부분	금융사고 가능성
카드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카드혜택 제공을 통한 영업확장 ■ IT 및 결제기능 수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력업체와 연계업무 多 ■ 보안·인증 취약 가능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휴서비스 업체 통제 실패 ■ 개인정보 정보유출 가능성
캐피탈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고차 금융 특화 ■ PF대출 취급 비중 高 ■ 틈새시장(렌트상용차) 공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모집인 의존도 高 ■ 담당자 복수업무 수행등 ■ 低신용 차주/금융이용정보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모집인 통제 부족 ■ 자금집행단계 위변조 可 ■ 사기대출 인지 부족 등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,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「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」을 마련
 -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부문(①제휴업체 선정관리 ②자동차금융 ③PF대출 ④앱카드 인증 ⑤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)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
 -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
- '24년부터 내부통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, 여전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·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

※ 단, 동 개선방안은 여전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용 할 예정

II. 주요 내용

가.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.

①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·관리 기준 체계화

- ✓ 실무부서 임의선정
- ✓ 역량평가 생략
- ✓ 일상감사 회피
- ✓ 계약 적정성 평가생략
- ✓ 이행실적 미점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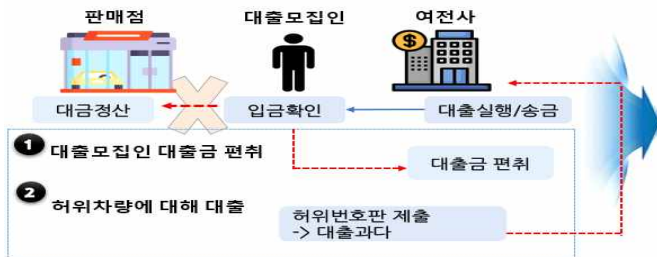
서비스 기반
비용지급

표준
가이드라인
마련

임의
업체 선정
방지

이행실적
점검
/계약평가
의무화

②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



- ✓ 판매점 명의 에스스로 계좌 입금
- ✓ 대출모집인에 증빙제출 의무화
- ✓ 자동차금융 신용정보체계 개선
- ✓ 여전사에 강화된 주의 의무 부과

③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

- ✓ 자금인출 요청서/출금전표 위조
- ✓ 수신계좌 변경을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
- ✓ 결재자 비밀번호 지득을 통해 업무처리
- ✓ 전표결재시 친필 서명 위조



- 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
- ②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 송금
- ③ 자금 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

④ 앱카드 인증강화

- ✓ 제3자에 의한 앱카드 사용 위험
- ✓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과다 결제 이용



- ✓ 은행계좌 1원 인증 등 추가
- ✓ 환금성 결제시 추가인증 의무화

⑤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

- ✓ 분할송금 통한 전결권 한도 우회
- ✓ 비정상적 수신처에 대한 송금 사전통제 미비
- ✓ 주요증서/실물, 인감 등 통제 소홀 등



나.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합니다.

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

- 견제기능/직무분리 강화, 문서보안 강화,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

② 준법감시/감사 역량제고,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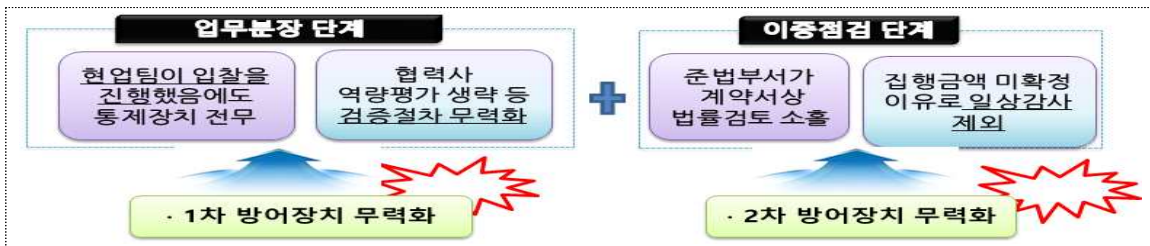
- 준법감시/감사조직 역량제고
-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(명령휴가제, 순환근무제, 내부고발 활성화, 자점감사 강화)

가.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

1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·관리 통제 강화

- (리스크요인) 제휴업체 선정·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,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 부족

<최근 카드사 배임사고 사례>



- ⇒ (개선사항) 제휴업체 선정·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, 이를 미준수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 마련

① 제휴업체 선정주체 관련 합의결재 강화(일선부서 '임의결정' 방지) ② 법률검토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③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④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⑤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⑥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

2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

1) '중고 상용차' 대출금 편취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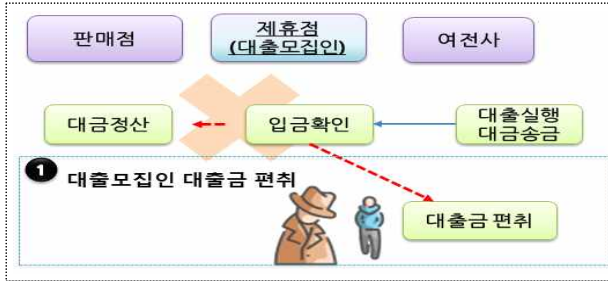
- (리스크요인)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*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위험에 노출

* 상용차대출은 대출금액이 커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아 예외가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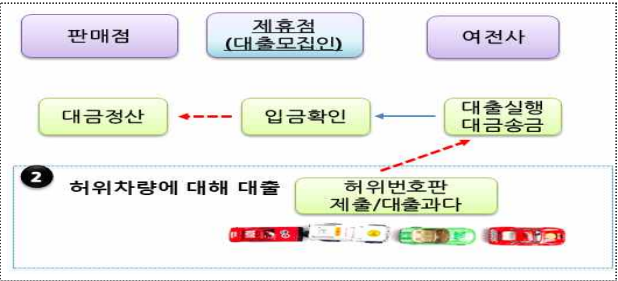
- 지입계약* 상용차대출은 거래구조상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사고금액이 확대될 소지

* 상용차 차주는 지입회사(운송회사 등)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등록, '영업용 번호판'을 받고 일거리와 보수를 받는 구조로 명의이전, 근저당설정까지 15~30일 소요

<중고 상용차대출 사고유형①>



<중고 상용차대출 사고유형②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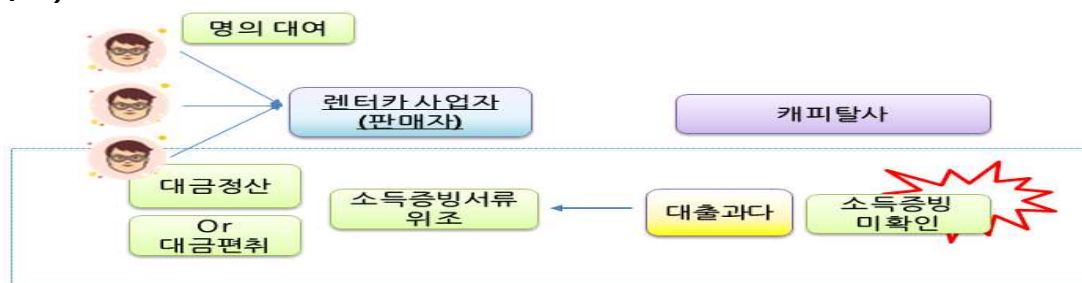
⇒ **(개선사항)** ①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*, ②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, ③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 강화

* 비용과다 등으로 도입이 당장 어려울 경우 송금前 차주에게 대출의사 및 자동차 실물 인수 준비 상황 등을 확인(해피콜, 문자서비스)하고 대출금액조건 등을 안내한 후 송금

2) 자동차금융 차주 관리 강화를 통한 허위대출 방지

□ **(리스크요인)** 고객이 자동차 금융을 다수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명의대여 및 허위 소득증빙 제출 차주에 대한 식별 미흡

(사기수법)



- ① 렌터카사업자가 할부·리스·렌트 계약상 명의를 빌려주면 **대출금** 등을 대신 갚아주고 렌터카사업을 통해 **발생 수익금**을 **분배**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명의 양도 유도
- ② 고객이 **소득증빙서류** 등을 **위조**하여 캐피탈사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**확인치 못해** 한명의 명의자에 수십 건의 자동차 할부·리스계약 등을 체결, 자금대여

⇒ **(개선사항)**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①**신용정보 코드체계**(신용정보원)를 개선*, ②**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**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

* 대출, 리스 거래가 자동차 관련인 경우 식별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련 거래 하위코드 신설

3 PF 대출 등 관리강화를 통한 비정상적 송금 차단

- (리스크요인) 동일 담당자·부서에서 복수 업무 수행, 다층(多層) 점검 구조 미비 등으로 비정상적 송금 차단에 한계

(사기수법)

- ① (인출요청서 접수단계)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서 위조
- ② (전표 입력단계) 차주가 既날인한 공란 출금전표*에 사고자가 전표 나머지 부분을 임의 기입하여 인출
* 업무상 편의를 위해 차주가 기날인한 출금전표를 다량 보유
- ③ (수신계좌 전산입력 단계) 수신계좌 전산입력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좌주명(예: 가족)을 변경(신탁사 등)하여 정상거래로 위장
- ④ (전자결재 단계) 결재자 비밀번호를 지득하여 직접 업무처리하거나, 전표 결재의 경우 책임자(승인자)의 친필서명 위조

⇒ (개선사항)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

- 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
- ②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限 송금허용
- ③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(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, 사용 인감 사전신고,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) 마련 등

4 앱카드 인증강화

- (리스크요인) 앱카드 등록사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절차 미흡으로 제3자에 의한 앱카드 사용 위험 노출,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를 통한 현금화로 고객 피해 가능성

⇒ (개선사항) 앱카드 발급시 본인,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*

* 예)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하여 본인인증절차 강화

-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여 본인 구매여부 재차 확인

5 | 횡령 등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

- (리스크요인) 송금업무, 법인인감·중요증서에 대한 통제 및 경비·자본예산에 대한 점검 미흡 등으로 인한 횡령·배임 가능성

* 건당 송금액 기준으로만 전결권을 운영함에 따라, 전결금액 미만 분할 송금하는 방식을 악용한 사고위험 내재, **중요증서·실물, 인감**에 대한 금고보관/분리관리 미흡 등

⇒ (개선사항) ①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, ②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도입하여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, ③거액 송금 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

나.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

※ 그간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되었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예방조치 실효성 개선

1 |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

-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
 - 직무분리 필수 직무 내규 명시 및 대상 직무·담당자 등록·관리
 - 업무분장 변경 사유 내규 명시, 업무분장 변경 승인절차 강화
 -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(또는 감사부) 점검 실시
- 문서 보안 강화(전산등록 의무화) 및 접근통제 고도화

2 | 준법감시 조직 등의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

- 준법감시 조직 역량 제고
 - 준법감시 인력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
- 명령휴가 대상 확대(고위험업무, 장기근무자) 및 강제력 제고
 -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 명령휴가 의무화
-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

III. 추진 일정

◆ (Two-track) ①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**조속히 반영**토록 지도하되, ②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**준비기간을 부여**하고 여전사가 현장에서 **제대로 반영**할 수 있도록 **지도·점검**

□ 모범규준 시행 및 여전사 내규 반영(~'24.1분기)

-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(금년말)하고, 개별사 내규 반영·시행('24.1분기)

□ 내부통제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('24.3분기)

-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

※ 정기(수시) 감사시에도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지속 보완 지도

□ 횡령·배임 등 관련 제재 근거 법제화 추진 지원

-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·배임 등 관련하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* 마련 작업을 적극 지원

*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 법령에는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 부재

<참고> 여전사 역량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강화방안 운영

- 업권내 금융회사의 자산·인력 규모 등의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대형사는 강화된 기준을, 중소형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이원화*

* 중소형사(잠정 : 자산 2조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)는 대규모 인력필요사항 및 전산시스템 투자 필요사항을 배제

- 중소형 여전사의 경영 취약부문에 대해 금감원이 역량강화 등 지원
 - 자율진단제도 도입 및 책임자 지정을 통해 경영 취약요인에 대한 상시점검 후 자율 시정토록 유도 [정기적(1~2년)으로 시행]
 - 신규 등록 여전사 대상 내부통제 컨설팅·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부통제역량 제고를 측면 지원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[붙임] 「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」 상세내용

1. 여전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

1 제휴업체 선정·관리 통제 강화

◆ 제휴업체 선정·관리에 대한 **표준규정**을 마련하고, 동 사항 미준수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**견제장치** 마련

- **(제휴계약 업체선정 담당부서 임의결정 방지)** 상품출시 계획 품의시 준법감시부서·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재토록 의무화
- **(계약품의시 사전절차 관리 강화)** 제휴업체 역량평가 및 입찰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, 그 결과를 계약체결 품의서에 필수 기재
- **(제휴서비스 기반 비용 지급)** 제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용 지급 기준을 산정토록 의무화
- **(자금집행 관리 강화)**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(소액제외)하고, 미수감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 강화
- **(계약전 확인사항 지정 및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)** 계약서 날인 前 필수 확인사항*을 지정하고 총무부서 확인을 거쳐 날인 의무화
 - * (필수확인사항) 상품출시·계약체결 품의서, 법률검토 결과서, 일상감사 이행여부, 업체선정주체 부서 적합성 등
- ‘인감날인입회자’ 역할을 신설하여 독립된 제3자 확인 후 날인 및 기록 관리토록 견제장치 마련
- **(법률검토 사항 명확·구체화)** 제휴업체와의 계약서 적정성 검토시 체크리스트를 활용·이행토록 의무화하고, 법률검토 부서는 이를 법률검토 결과서에 의무적 첨부
- **(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재평가 의무화)** 주기적으로 제휴업체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적정성을 재평가

2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

◆ 중고 상용차 거래시 **에스크로 계좌**를 활용한 지급, 대출실행 후 즉시 **증빙자료 징구의무** 부과 및 **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** 등 실시

- **(중고상용차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·횡령 가능성 차단)**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, 고객이 차량 인수후 출금 허용
 - 비용과다 등으로 에스크로 도입이 당장 어려울 경우 차주에 송금前 대출의사 및 자동차 실물인수 준비 상황 등을 해피콜,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대출금액·조건 등을 안내* 후 송금토록 보완장치 마련
 - * 여전사별로 표준 스크립트 마련
- **(중고상용차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)**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여전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의무화
 - 차주에게도 차량인수 전 또는 이후 일정기간 內 차량 사진*도 제출토록 하여 허위매물 또는 무가치매물 여부를 즉시 확인
 - * 외관, 차량번호, 차대번호 등 포함
 - 여전사 대출 취급 후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 모니터링, 방문·점검을 통해 실재(實在) 여부 등을 밀착 점검토록 의무화
- **(자동차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)**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토록 신용정보 코드체계(한국신용정보원) 개선*
 - * 대출, 리스 거래가 자동차 관련인 경우 식별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련 거래 하위코드 신설
- **(여전사에 강화된 주의 의무 부여)** 신용정보 조회 결과, 자동차금융 다중이용 차주인 경우 강화된 주의 의무 적용
 - 기 보유 차량 실사용 여부, 대출서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영업조직(지점) 외 별도 조직(본사 부서 또는 지역본부)에서 추가 확인
- **(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)** 상품설명서에 고객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자동차금융 사기대출 피해의 위험성 안내,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명시

3 PF대출 등 관리 강화

1) PF대출 관리 강화

◆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, 비정상적 송금 차단 통제장치 강화

- (PF대출 업무 관련 직무분리기준 마련) 영업·심사·송금·사후관리 등에 대해 담당 부서(담당자)를 직무분리하고 영업담당자가 대출승인, 송금 등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
- (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) 시스템상 계좌 번호에 연동되어 수취인 명의를 자동생성되게 하고, 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시 송금이 차단되도록 시스템화
- (지정계좌 송금제 시행)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친 지정 계좌로만 입금 가능토록 제한
- (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) 자금집행 前後 확인절차 강화
 - (집행前)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, 사용인감 사전신고 및 자금인출요청서상 인감과 사전신고인감의 대조
 - (집행後) PF 대출금 송금시 차주 앞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, 차주 앞 PF 대출잔액 정기 통지 등
- (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 강화) 기성고에 따른 PF대출 자금인출의 적정성, 지정계좌·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을 지점 감사·준법감시부에서 정기(수시) 점검

2) 편법 대출 관리 강화

◆ 대출취급시 고객의 타사 대출신청내역 확인 강화 및 대출증빙 진위 확인 강화

- (고객의 최근 대출신청·승인 내역 확인 강화)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이 난 경우라도 송금 직전에 고객 보유 대출의 변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절차를 마련
 - 신청시점에 고객으로 하여금 타 금융회사를 통해 최근 진행했거나 단시일내 진행예정인 대출내역을 사전고지 하도록 요구
- (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사후점검 강화)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 또는 스크래핑(scraping)을 활용하여 확인*
 - * 진위확인 곤란 증빙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절차(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등) 수행
 -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의 유용 사후점검에 대한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(또는 감사부) 정기점검 강화

4 앱카드 인증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

◆ 앱카드 발급 및 환금성상품 거래시 추가인증수단을 통해 본인인증 강화

- (앱카드 발급 시 강화된 본인인증) 앱카드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*토록 의무화
 - *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하여 본인인증절차 강화
- (상품권 등 환금성상품 거래 승인절차 강화)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

5 자금관리 업무 강화

◆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송금절차 통제 강화 및 인감·중요증서 등에 대한 관리 강화

- (일정기간(일/월 단위)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) 전결금액 미만의 분할 송금을 통한 거래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누적 송금액을 기준으로 전결권을 신설 (동일거래 분할송금 금지 등의 방안도 허용)
- (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활용)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이체 거래시 사전에 부서장·영업점장(이하 '부·점장') 결재를 통해 등록된 계좌로만 이체 가능한 “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” 활용
 - 일정금액 이상 거래 발생시 부점장, 내부통제책임자, 내부통제담당자에 입출금내역이 전달되는 “자동통지 시스템”도 마련
- (주요 거래 자금인출건 관리 강화)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 자금인출시 승인 절차를 다단계화(3단계 이상 승인)하고, 사전·사후점검 실시
- (중요증서·실물 및 인감에 대한 관리 강화) 중요증서·실물 및 인감에 대해 별도 담당자(부서)를 지정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, 사용 및 반납 이력을 (전산)관리대장 등에 기록·관리
 - 인감 내·외부 사용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 외부 반출시에는 반드시 직원 2인이 동반하고 당일 반납 의무화
- (통장 직접 반출을 사용한 이체 거래 관리 강화) बैं킹관리자가 출금 전표에 부·점장, 인감날인자와 인감날인입회자의 승인*을 득한 후 인감을 날인하여 통장과 함께 반출

* 부점장, 인감날인자, 인감날인입회자는 겸직 금지

2.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

1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

◆ 직무분리 필수직무 등록 및 업무분장 변경통제 강화 등

- ☐ 직무분리 필수 직무 내규 명시 및 대상 직무·담당자 등록·관리

<직무분리 세부운영기준(안)>		
구 분	일선업무	후선업무
일반여신	영업	서류진위확인, 심사, 기표, 송금, 상환 등
PF대출	영업	심사, 기표, 송금, PF사업장 모니터링 등
	기성고에 따른 대출기표	대출기표 후 자금송금
자금관리	자금지출결의 담당	자금집행담당자(송금 담당)
인감관리	인감날인 담당	인감날인입회자(인감이용 내부통제담당), 부·점장
여신심사	여신심사	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지정 등*
고유자금투자	투자승인신청, 투자운용	투자심사, 자금집행, 사후관리(리스크관리) 등

* 차주·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하여 하자담보 취득 후 대출 실행할 가능성을 차단

- ☐ 업무분장 변경 사유 내규 명시, 업무분장 변경 승인절차 강화
- ☐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(또는 감사부) 점검 실시

2 문서 보안 강화 및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

◆ 서면결재 문서 전산등록 의무화 및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

- ☐ 서면결재·외부수신 문서* 전산등록 의무화 및 정기점검 실시

* 대금지급 및 금융거래 관련 문서

- ☐ ID / PW 방식 外 별도의 추가인증 절차* 의무적으로 시행 및 로그인 통제 강화

* (예) 모바일 OTP, QR코드 인증, 지문·안면·홍채 인식 등

3. 준법감시 조직 등의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

1 준법감시 / 감사조직의 역량 제고

◆ 준법감시인력 규모 최소기준 설정 및 이사회·경영진의 현황 점검 의무 부여 등

☐ 준법감시 인력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*

* (예시) 총직원의 1% 이상(대형사 기준) [인력확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'28년말까지 단계적 시행]

☐ 이사회·경영진의 준법감시 인력현황·겸직상황 주기적 점검 의무화

☐ 준법감시인 선임조건으로 관련 업무* 경력 우선 고려

* 2년 이상의 내부통제, 감사, 회계, 법률 등의 업무[채용기준 정비등을 감안해 '26.1.1.부터 시행]

2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

◆ 명령휴가·순환근무·내부고발·리니언시 제도 정비 및 강화

☐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* 명령휴가 의무화

* 고위험업무 담당, 동일 부서·직무 장기근무자(5년)

○ 고위험업무 담당 및 장기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휴가 실시

○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되, 명령휴가 실시 결과(실시율, 감사결과 등)를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 의무화

☐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여전사 내규에 명시*

* 순환근무주기, 미적용 대상, 예외허용 승인절차, 장기근무자에 대한 특명감사 등

☐ 금융사고 자체감사시 '내부자 고발의무 위반'을 필수감사항목*으로 운영

* 사고금액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무 위반 여부 조사

☐ 협력업체·여전사 임직원 자진신고시 징계 등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* 도입

* 경감·면제 기대효과로 부당행위의 탄로 가능성이 높아져 사고 가능성을 저감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